

새꿈도시 지정 40곳중 30곳 이상 첫 삽도 못뜨고 방치

■전면 재검토 필요한 전남도 새꿈도시·한옥마을 조성사업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을 내걸고 추진중인 새꿈도시·한옥마을 조성사업이 골고루 진행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서 조성 후보지만 지정해놓고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수인데다, 판박이처럼 엇비슷한 한옥들로 조성하면서 지역 특색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한 전원마을을 조성사업도 입주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성과가 저조하자 정부도 지원을 중단했다.

◇말 뿐인 은퇴도시=새꿈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 100가구 이상 전원주택과 편의시설·프로그램 등 복합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분양하는 전남도의 브랜드 사업이다. 은퇴자들이 새로운 꿈을 열고 개척할 수 도시를 조성, 고품격화와 탈 농촌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전남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의미다.

전남도는 4곳의 선도지구를 비롯해 40곳을 후보지로 지정했고 민간 투자자에게는 30억원 범위에서 공공기반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상은 거창했지만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40곳의 후보지 중 민간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선도지구인 무안 월선지구 경우 지난 2009년 9월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10년 넘도록 첫 삽도 못뚫었다. 민간 사업자는 480억원을 들여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일대에 239세대가 들어서는 전원주택을 조성키로 하면서 무안군과 협약까

민간 투자자 못잡고 주민 반발

사업 추진 지역도 규모 대폭 줄여

판박이 한옥마을 지역특색 죽여

정부도 전원마을 사업 지원 중단

지 맺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무안군 몽탄면 이산지구와 일로읍 구정지구는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후보지로만 지정된 채 방치되고 있다.

장성도 비슷하다. 동화면 남산리 장성푸른솔 CC 일대 32만8000㎡ 부지를 1000-300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이 들어선 '은퇴자들의 새꿈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은 빛이 바랜 지 오래다. 최소 조성 규모를 200세대 수준으로 축소했어도 여태껏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다른 후보지인 장성군 북이면 수성지구도 농림지 그대로 묵혀놓고 있다.

이런 상황이나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지도, 인구를 유입하지도 못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순천(3곳), 광양(1곳), 담양(1곳), 곡성(3곳), 구례(1곳), 고흥(2곳), 화순(1곳), 강진(2곳), 영광(3곳), 진도(1곳)도 후보지로 지정된 해놓았을 뿐 공사는 커녕, 투자자도 찾지 못한 채 방치했다. 오죽하면 담당 직원들 사이에서도 '새꿈도시' 라는 사업을 '처음 들어본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신들이 신청하고도 후보지로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시군 입장에서선 전남지사 시절 시작했던 사업이라 관심도 덜었고 전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름만 있는 사업'으로 전락했다. 민간 투자자로서는 2년 가까이 걸리는 행정 절차에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예초 사업 규모에 비해 조그라들고 사업 시기도 늦어졌지만 진행되고 있는 대상지도 있긴 하다. 장흥 로하스타운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200세대가 머무르는 대규모 은퇴·전원 도시로 조성한다는 게 장흥군과 전남도 구상이었다. 하지만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고작 43세대만 입주한 상태다. 추가로 17세대 분양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350세대 규모의 개발계획이 이제서야 마련되고 있다.

담양 대덕지구와 매산지구도 예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민간 투자자가 사업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등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판박이' 한옥마을=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진행중인 한옥마을 사업도 천편 일률적인 건축으로 지역 특색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지역에만 107개 한옥마을이 조성된 상태로, 1479채가 완공됐다.

신축 면적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에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한옥 건



무안군 청계면 월선리 한옥마을 전경.

축을 장려하고 있지만 건축기간 단축과 수익성 확보에 신경쓰다보니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 특색을 극대화하려는 고민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게 건축 전문가들 지적이다.

전남도가 이들 한옥마을 조성에 291억원의 보조금과 432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것을 감안하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경관계획과 연관성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

옥이 전남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도 지방비를 지나치게 지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원마을 사업, 정부도 효과 의문=농림부가 2004년부터 공모를 거쳐 추진해온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농촌지역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사업 효과가 크지 않아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주도해 추진토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

정 형편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 중단'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업지로 선정된 뒤 도시민 유입이 이뤄져 건축으로 이어진 경우가 전체의 55%-60% 수준에 그치면서 농촌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정부와 시·군 등은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남지역 13개 시·군 53개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해 960억(국비 557억·시군비 398억·도비 5억)을 투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청와대 “北 탄도미사일 발사 예의 주시”...정의용 실장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

문 대통령 평화경제 언급 하루만에 네번째 '미사일 도발'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기간인 6일 새벽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관계 장관들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철저한 감시 및 대비 태세를 유지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저강도 도발’을 이어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쏜 것이다.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이 명분이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면서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의 열도록 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을 포함해 네 차례의 도발에서 정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나 관계장관 회의로 대신했다는 점도 나름대로 대응 수위를 ‘톤 다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북한 역시 대화를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날 북한 외무성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24분과 오전 5시 36분께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37km, 비행거리는 약 450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호도반도, 지난달 31일 원산 갈마반도,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단거리 발사체 각각 2발씩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노영민 “지소미아 파기 여부 24일까지 검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이 군사·안보적 협력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 “(미국 요구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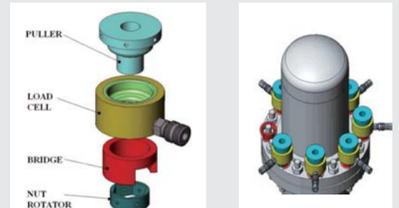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파 소송 수임 논란을 제기한 곡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곡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한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상속세·법인세 소송에서 유족들이 위증을 하고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지 말고 국회 정론관(기자회 경장)에 가서 말씀하러”고 받았다. 헌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리에서 말하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이에 곡 의원은 노 실장에게 “삿대질 하지 마시라”며 “국민들은 문 대통령이 사기 소송에 가담했는지 그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우리 모두가 꿈꾸는 21세기 풍요로운 미래”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진성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주)진성이앤피
 광주광역시 광산구 안창동 734-7
 TEL | 062-953-8342
 FAX | 062-953-2742
 E-mail | moojin@newmoojin.com

원자력에서 검증된 MJ텐서너



▶ 고압 1500bar, 2500bar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업계에서 20년동안 쌓아온 품질 및 기술이 적용된 제품 - MJ텐서너

진성과 손을 잡고 국내 및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해나갈 에이전트를 찾습니다